

# 고금리 직격탄... 한계기업,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 되나

이자도 못 내는 기업 17.1%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경고등  
고금리 뉴노멀에 기업 부담 가중  
도미노 부실 뎀 경기침체 우려  
선별 지원·적극 구조조정 시급



ChatGPT로 생성한 '고환율과 고금리 이중 압박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국내 기업' 관련 이미지.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대파적 통화정책(통화 긴축) 유지와 시장 금리 상승에 빛이 많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벌어들인 돈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한국의 한계기업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2021년 기준)로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계기업들의 도미노 붕괴가 나타날 경우 금융기관 부실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중동발 리스크, 경쟁력 약화에 노출된 기업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보면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2024년 말 기준)였다.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8.0%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이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출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꼽는다. 선진국이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기술 수준을 키우고, 중국이 2015년부터 '제조 2025'를 표방하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쇠약해졌다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 쪽에서 한계기업이 늘면 전체 경제성장률과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량 기업이 많았던 수출 부문에까지 한계기업이 늘어난 상황은 크게 우려할만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전쟁 후 한층 짙어진 '고금리 뉴노멀 충격'도 기업 전반의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2년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업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2조원 증가한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비금융부문 빚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6220조5770억원)보다 약 280조원(4.5%) 증가한 수치다. 기업부채는 3700조7807억원으로 같은 기간 700조원(23.34%) 늘었다. 금융감독원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0%다.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파업 등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며 "그나마 저금리로 버티던 기업들이 중동 사태 이후 금리 부담뿐 아니라 원화값 약세의 뉴노멀로 인한 외화부채 증가까지 겹겹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 ◆벼랑끝 기업 살릴 해법은

한국은행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기업의 투자경로를 중심으로'(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 등)란 제목의 이슈노트에서 "2014~2019년 중 전체 표본 기업 가운데 3.8%가 퇴출 고위험 기업이었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였고, 이들 기업이 실제 퇴출되고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해당기간 투자는 3.3%, 국내

총생산은 0.5%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팬데믹 이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의 비중은 3.8%로 여전히지만 실제 퇴출 기업 비중은 0.4%로 더 낮아졌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체됐다면 투자가 2.8%, 국내총생산 0.4%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한계기업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세계적 구조조정 등 '당근과 채찍'이 모두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을 고려해 전반적인 신용위험 관리에 힘쓰고,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기업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넘어 생산성과 혁신성 기준으로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정년 후 길어지는 소득 공백... 든든한 노후엔 '다층연금'

## 연금과 생존전략

### ④ 노후대비 선택 아닌 필수

정년 60세·연금개시 65세 '소득절벽'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30%대 초반 퇴직연금 사각지대 여전히 노후 대비 IRP·연금저축·주택연금 활용 필요

고령화시대의 '노후 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데이터센터(옛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4년 기준 약 83.7세(남자 80.8세, 여자 86.6세)다. 20년 전보다 6년 이상 늘어났다. 반면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최소 2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단순 계산해 보면, 월 250만원 기준 6억~7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층연금' 탑을 쌓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IRP), 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매월 현금화가 가능한 연금 준비가 필요하다.

### ◆불충분한 연금... 노후소득 부족

40~50대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40년의 납입을 가정해 소득대체율을 산정했지만, 실직이나 빠른 은퇴 등을 이유로 실제 납입 기간이 4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납입 기간 평균은 19년9개월(237개월)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090년에도 납입 기간이 28년(336개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일해야 하는 나이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 공공일자리를 살피는 시민들. /뉴스시

망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30%대 초반에 그치게 된다.

빠른 은퇴를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인 만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다. '소득 공백'이 이어지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7월부터 100만명을 넘겼다.

13일 국가데이터센터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자의 평균 나이는 61.6세로 집계됐다. 법적 최소 정년인 60세보다는 1.6년 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보다는 3.4년 빨랐다. 은퇴자 대다수가 재취업을 희망했으나, 재취업자 대부분은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임금 감소 겪었다. 재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잦았다.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65세인데도, 대부분의 고령자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를 겪고 '소득 절벽'에 직면하

게 된다.

퇴직연금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해야

은퇴 이후에도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 축으로 각종 연금제도와 금융상품을 활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연금탑)'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추가가입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소득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구조에 따라 주택연금·개인형IRP·연금저축 등 별도의 연금상품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한 액수와 기간 만큼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

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 제도보다 수익성이 높고 종신지급도 보장한다. 주부·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을 우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64세를 위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지급을 중단하고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금액을 일부 되돌릴 수 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실직·휴직·육아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최대 119개월분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율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추가납입 시에는 납입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만큼, 2026년 내에 납입한다면 9.5%의 보험료율에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특히 유리하다.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두 상품을 함께 이용하면 연 최대 9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양승진 기자 asj1231@

>> 1면 '美, 첨단 제조능력... '서 계속

## "2028년까지 38조 투자 장기 성장기반 강화"

또 정 회장은 핵심 시장인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가 그룹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에게 미국은 장기적인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38조 원)를 투자해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40여년전 미국에 진출한 이후 205억달러를 투자해왔다"며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소프트웨어 기반 제조 혁신 등을 통해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고객, 규제, 공급망이 지역별로 나뉘고 세계 시장은 점점 분절됐다"며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확장과 지역별 민첩성 결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국 생산기지와 미국 HMGMA, 미국 내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 신규 생산 거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수소 사업과 관련해선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소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소는 전기차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기술"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내외 환경 변화는 모두가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승원 기자 ysw@



metro